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2015. 12.

대전발전연구원

Ⅱ 참여 연구진

- 연구 책임

황혜란

- 연구 참여

이정범, 류유선, 성선제, 김소영, 금홍섭

- 부문별 작성

2016년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 성선제, 김소영, 류유선

2016년 한국과 대전의 비전 : 황혜란, 이정범

2016년 대전의 발전전략과 과제 : 금홍섭

연구 요약

1 2016 세계 전망

- 2015 전지구적 10대 위협(세계경제포럼WEF)
 - (도전과제)농업·식량안보, 포용적 경제성장, 고용과 인적자본, 환경과 자원 안보, 세계금융시스템 안정, 미래 인터넷, 젠더균형, 범죄와 부패 퇴치, 중장기투자자와 인프라 구축, 국제무역과 투자를 선정
- 2016년 세계 전망
 - (정치·안보)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정책, IS 등 국제 테러리즘, 북한 체제 취약성 심화, 사이버 안보, 에볼라 등 감염병 재앙,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밀월 관계 등이 국제정치와 안보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을 예상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2016 글로벌 전망 Global Forecast」)
 - (경제) 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은 2016~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3.1%보다 약간 높은 3.6%로 전망
 - (기술) 세계적 기술컨설팅 회사, 카트너(Gartner)는 2016년 주제로 ‘디지털 미래’를 선정함. “스마트머신”, “디지털메쉬”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 “새로운 IT 현실” 등 세 가지를 키워드로 10대 전략기술을 발표함
 - (소비) JWT Intelligence는 2016년 주요 트렌드로 Z-세대의 부상, 뉴로 마케팅, 차이메리컨 영화 등 100대 트렌드 선정

2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 미국

- (대통령 선거) 경제, 불평등 심화, 테러 대응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 전망
 - 외교 및 안보 분야 주요 이슈는 IS와 테러리즘 대응
 - TPP 문제, 이란 핵합의 문제
 - 중국의 부상 문제
 - 난민
 -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적 불평등, 이타적인 야심, 워싱턴의 아웃사이더 강조

-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제적으로 금리 인상, 완만한 경기회복, 석유 가격 안정, 소프트 경제 혁신 전망되나 불평등 심화 논란 가속화

□ 중국

- (소강小康사회) 2016년 중국은 4대 전면적 ‘개혁심화, 의법치국, 소강사회,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을 천명하며 소강사회 실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2015년 양회, 시진핑)를 피력함
 - 2단계: ‘소강(小康)’ 사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2020년 중국의 1차 목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의법치국) 종래의 인치적 국가 관리에서 완전히 탈피해 근대 국가적 통치 방식으로 전환
 - 향후 10여년간 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음을 의미

□ 유럽

○ (테러) IS의 테러

- 극도의 무슬림 공포와 다문화 갈등 충돌 위험 최고조에 달할 전망

○ (EU 통합 후퇴) IS 테러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하여
생켄조약(국경자유통과협정) 일시정지

- 3백만명의 난민 유입 예상(Future of the European Economy, EU)

- 영국의 EU 잔류여부

□ 일본

○ (헌법 개정-중의원 해산 가능성) 개헌 발의 요건인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에 필요한 의석 확보를 위해 참의원 선거일에 중의원
선거도 함께 치르는 ‘더블 선거’ 가능성도 거론

○ (보통국가 표방)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표방하며 방위비 5조엔을
돌파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 부각

□ 기타

○ (러시아) 석유가격 하락으로 국가부도 위험 직면

○ (IS) 확산: 역사를 다시 쓰다

3 2016 글로벌 트렌드

□ 2016년 글로벌 트렌드



1 한국의 변화와 비전

□ 한국의 거시 및 미시적 차원의 변화

- (거시적 차원)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성이 축소되고 불평등 심화, 계층과 세대 간 갈등, 바이러스 공포,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위험사회'로 진입
- (시민의식)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 정치 개혁, 경제성장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안한 삶의 부분으로 노후불안과 고용불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 (미시적 변화) 경쟁격화, 실업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불안감과 무력감이 고조되고, 다른 한편 국가의 위험대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한 사회 구조로 인해 탈국가 현상이 증대
- (사회적 혁신) 개인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 관계망으로의 변화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중요성 증대

2 도시의 변화와 미래

□ 시민들의 도시 공간에 대한 수요 변화

- (위로와 치유의 공간) 도시의 익명성과 고립성을 보완해 줄 위로와 치유 공간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
 - 스웨덴의 우울증 치료 정류장, 캐나다 도심의 보타보타 선상사우나, 서울 어라운드 달콤창고 등 치유와 위로의 인프라 및 공동체

- (공유와 연대의 공간) 성장 잠재성 축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수요 증가로 공유와 연대의 공간 수요 증가
 - 무거주 주택 리모델링 공유임대, 소셜다이닝, 베희시장 등의 공간 공유와 연대 공동체 수요 증가

- (재미와 창조의 공간)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재미있는 도시, 개인의 창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기능 수요 증가
 - 아트모스페라 트램 관광열차,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도심재생, 일상적 창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크샵, 리빙랩 등의 수요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 도시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도심공공 공기청정기 스모그 프리타워, 일관이용 야간조명 자전거길인 반고흐길 등 과학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결합한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 가능

3 대전의 현황과 한계

□ 젊은 도시 vs. 제한된 기회

- 대전은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노령화 지표와 높은 청년 세대 비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낮은 청년취업률과 높은 청년 주거빈곤율 등 청년들의 성장기회는 제한되어 있음

□ 높은 성장잠재성 vs. 지체된 성장

- 대전은 높은 벤처기업 밀집도와 핵심산업 성장률 등 높은 성장잠재성에도 불구하고 GRDP 규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역 기업 및 산업 연계 미흡 등 성장의 지체현상은 상존하며, 동-서 격차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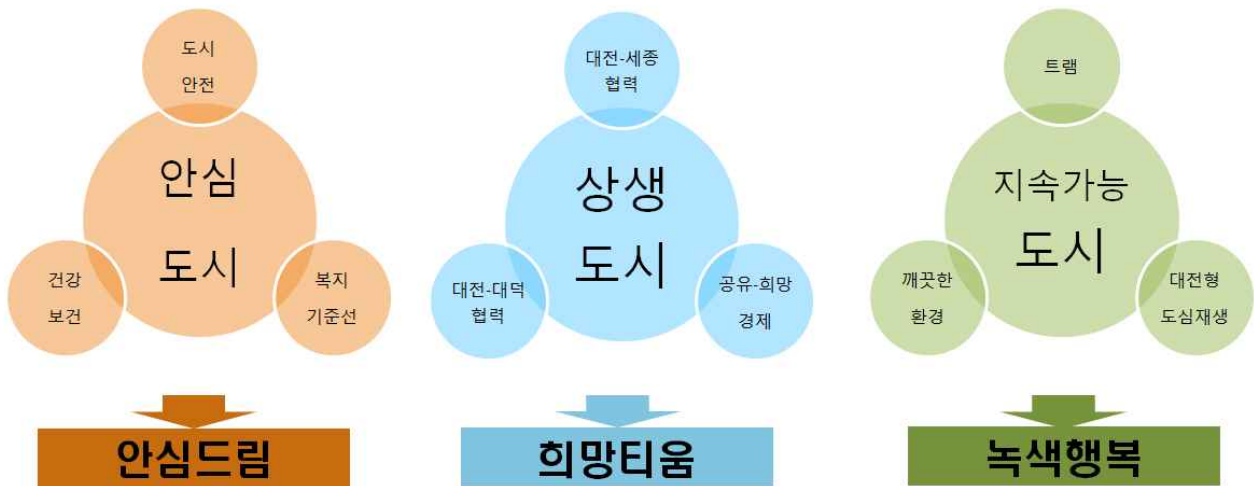
□ 높은 도시만족도 vs. 낮은 매력도

- 대전 거주민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양호한 생활인프라 및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문화·의료 등 거주편의시설 부족과 지역경제 침체 등 낮은 경제기회로 인해 외부로 부터의 유입요인은 부족

□ 양호한 복지 인프라 vs. 맞춤형 복지 미흡

- 대전은 양호한 복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복지사각 지대 상존, 공공 의료 기능 취약, 맞춤형 복지 시스템 미흡, 노인 일자리 부족 등 통합적 맞춤형 복지 시스템은 미흡

4 2016 대전 비전



□ 안심도시 ‘안심드림’

- 도시안전, 복지기준선 마련, 건강·보건 등 안전사회에 대한 욕구와 대전 이슈를 반영한 ‘안심도시’
- 도시안전디자인, 신종감염병 예방, 선제적 식품 안전관리,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등 2016년 대전 시정과제와 연계

□ 상생도시 - '희망티움'

- 공유경제 및 청년층에 희망을 주는 희망 경제에 대한 욕구와 대전-대덕 특구, 대전-세종 간 상생협력의 필요성 증가
 -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특허법원 관할 집중제 활용, 대전엔젤투자 확대,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청년희망펀드 활용 등 2016년 시정과제와 연계

□ 지속가능(전환)도시 - '녹색행복'

- 환경, 교통, 도심재생 등 환경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까지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추진을 위한 시정 방향
 - 문화예술의 결합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도심재생사업,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녹색교통, 안전한 급수, 유해물질 조사 등 2016 시정과제와 연계

5 2016 대전 비전 실행체계

□ 민-관-시민 협치 거버넌스 확장

- 민-관-시민 협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험과 '민-관협치 특별보좌관'의 위촉을 통한 민관협치 정책 실행의 통합적 운용

□ 융합행정 실행체계 설계

- 문제해결 중심의 행정 시스템 정착과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안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융합행정 체계 설계

1 민선 6기 약속사업 진단

□ 민선 6기 약속사업의 성과와 진단

- (성과)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사이언스컴플렉스 사업 확정 등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좋은 평가,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유치 등 국책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
- (협치 거버넌스 정비) 이해당사자 간 갈등조정 및 소통을 위해 시민행복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적거버넌스 정착과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등 투명성 증대에 노력

2 대전지역사회 진단

□ 대전지역사회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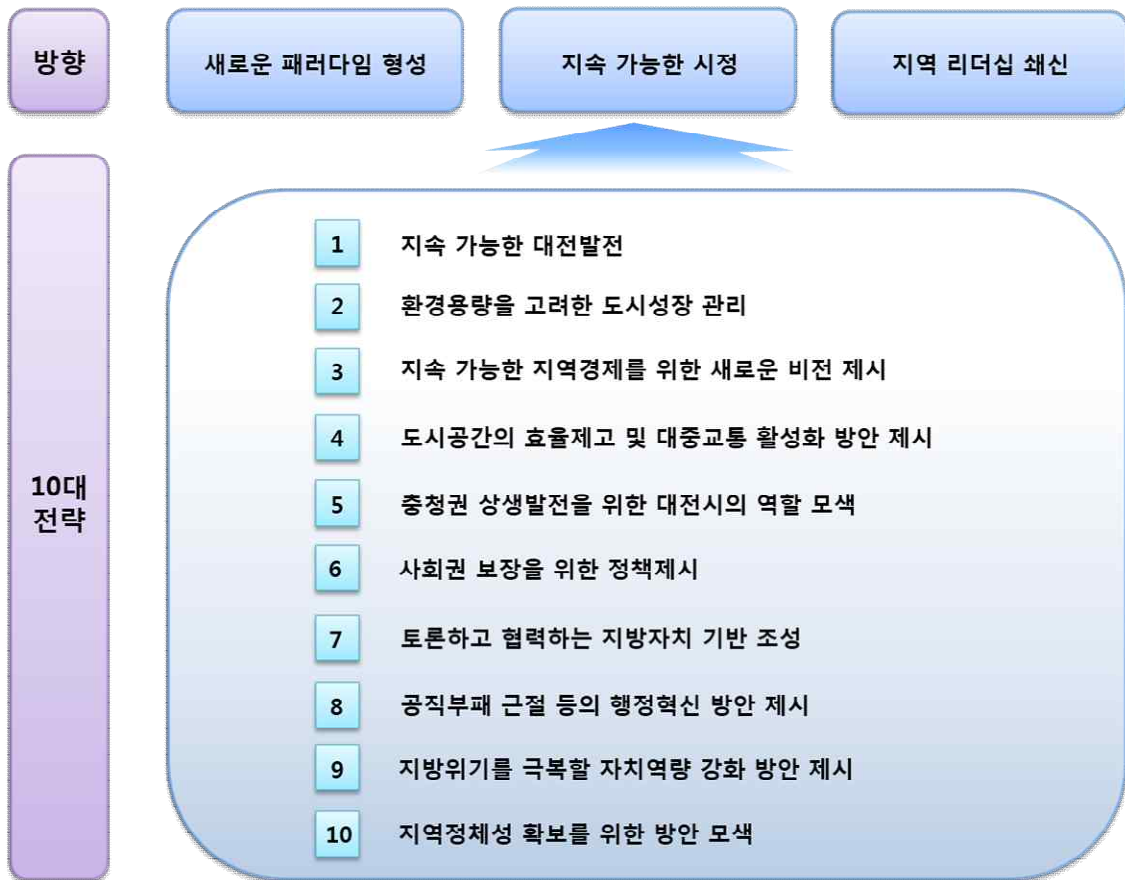
- (포용과 기회의 도시) 출신지별, 계층별, 공간별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텃세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는 도시
- (지식경제 특성)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나, 대덕특구, 3청사, 공공기관, 대학 등 지식기반 기관의 밀집으로 지식경제체제의 특성

□ 지역정치 및 현안진단

- (지방자치 20년) 강한 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 시민사회 미성숙이라는 제도적 한계 존재

- (지역정치 진단) 지방정치가 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고, 갈등과 반목의 중앙정치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음. 대전의 경우 전직 단체장 간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
- (기타 현안 진단) 도시개발과 토목·건설 중심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 부작용이 지속

3 2016 대전 3대 발전 방향과 10대 전략



4 2016 대전지역 발전 과제

-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준비
 -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본격적 논의와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 도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지역 주도의 신성장동력 발굴, 대전 경제 특성이 반영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모색, 소상공인 보호 육성 방안 모색

-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도시공간 전체에 대한 재편과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조속한 확정

- 도시철도 2호선 논란종식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중기 계획 수립

-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불안과 위험을 경감시켜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모색
 - 대전-세종 상생발전 및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발전방안 모색

- 지방자치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발휘
 -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정립, 시민참여 기반 시정운영, 공직부패 방지,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 종식

〈제목 차례〉

I. 2016년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1
1. 글로벌 트렌드	3
2.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6
1) 미국	6
2) 중국	8
3) 유럽	9
4) 일본	10
5) 기타	10
II. 2016년 한국과 대전의 비전	11
1. 대한민국 거시변화	13
1) 거시변화	13
2) 사회-경제부문	14
3) 정치부문	14
4) 과학기술과 안전	16
2. 대한민국 미시변화	16
1) 최근 시민들의 인식과 감정	16
2) 한국 사회 분절화된 개인의 등장과 사회혁신의 중요성 증가	17
3. 도시의 변화와 미래: 사람들은 도시에 무엇을 원하는가	18
1)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18
2) 공유와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18
3) 재미와 창조 공간으로서의 도시	19
4)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도시	20
4. 대전의 현황과 한계	20
1) 젊은 도시 vs. 제한된 기회	20
2) 경제: 높은 성장잠재성 vs. 지체된 성장	21
3) 높은 도시만족도 vs. 낮은 매력도	22
4) 양호한 복지 인프라 vs. 맞춤형 복지 미흡	22
5. 2016 대전 비전과 담론	23
1) 2016 시정 4대 전략	23
2) 2016 대전의 주요 이슈 : 전문가 조사와 시정방향	23
3) 2016 대전 비전	24
4) 2016 대전 비전에 따른 시정추진과제	25
참고문헌	27
III. 2016년 대전의 발전 전략과 과제	29
1. 들어가는 말	31
2. 민선5기 평가 및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32
1) 민선5기 대전시정 평가	32

2)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33
3. 대전지역사회 진단	34
1) 대전지역사회 특징	34
2) 지방자치 20년 진단	35
3) 지역정치 진단	36
4) 기타 지역현안 진단	36
4. 대전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	37
1)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38
2)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39
3)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40
4)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40
5)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41
6)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41
7)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기반 조성	42
8) 공직부패 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42
9)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 방안 제시	43
10)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43
5. 2016년 대전지역발전 과제모색	44
1)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준비	44
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준비	44
3)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45
4) 도시철도 2호선 논란종식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46
5)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46
6)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모색	47
7) 지방자치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발휘	47
8) 기타 지역현안	48
6. 나오는 말	48
참고문헌	50

I. 2016년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1. 글로벌 트렌드
2.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I. 2016년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1. 글로벌 트렌드

□ 2016년 글로벌 트렌드는 경제적으로는 포용적 경제성장, 불평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치·안보에서는 IS 등 테러리즘 심화 및 사이버 안보, 기술 및 소비에서는 스마트머신 등 새로운 디지털 경험 기술, 모바일네이티브인 Z-세대 주도의 1인 미디어 소비 등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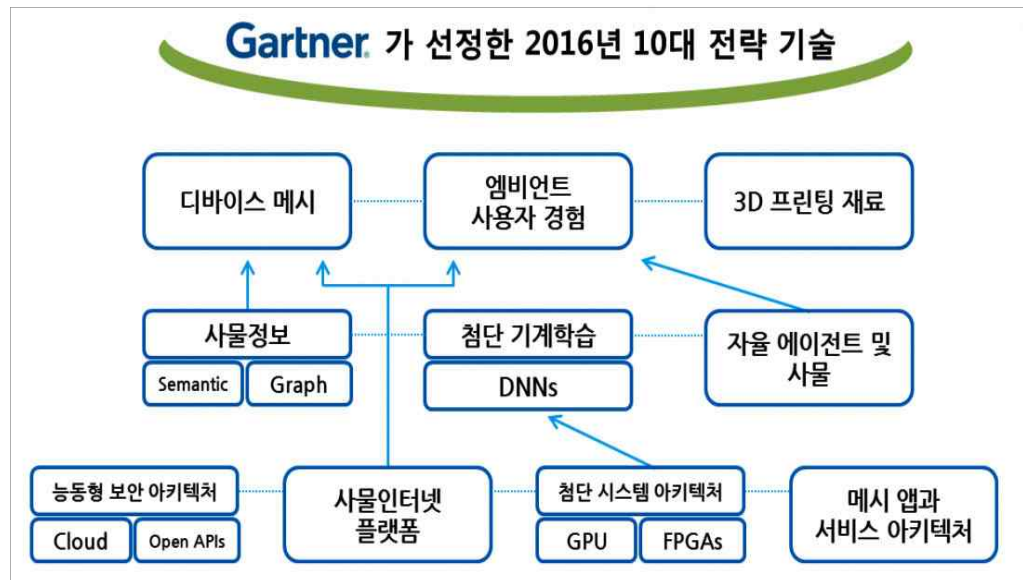
- (글로벌 키워드) 교황은 자비의 해(Merciful Like the Father), <이코노미스트 2016 세계경제대전망>은 비통함(Woes), 여성(Women), 승리(Wins)를 2016의 키워드로 제시. 미국 대통령선거, 테러와 난민, 저유가, 금리 인상 등이 키워드로 예측
-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10대 글로벌 챌린지로 (1) 농업·식량안보, (2) 포용적 경제성장, (3) 고용과 인적자본, (4) 환경과 자원안보, (5) 세계금융 시스템 안정, (6) 미래 인터넷, (7) 젠더균형, (8) 범죄와 부패 퇴치, (9) 중장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 (10) 국제무역과 투자를 선정함

※ 일명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WEF는 매년 1월 개최되므로 2016년 트렌드는 2016.1월 발표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 발간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2015.7)에서는 10년 후 정치·사회·경제·환경 등 우리사회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28개 미래 이슈를 제시

※ 미래부는 2014년 12월 미래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제·사회, 정치·행정, 자원·환경, 과학 기술 4개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미래이슈분석 작업 수행, KISTEP 및 KAIST와 공동으로 동 보고서 발간

분야	향후 10년 우리사회에 영향을 주는 미래 이슈
사회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 사이버 범죄
경제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정치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 (소비) 매년 전세계 소비트렌드 전망을 발표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JWT Intelligence은 2016년 주요 트렌드로 Z-세대의 부상, 뉴로마케팅, 차이메리컨 영화 등 100대 트렌드 선정

▮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는 2016년 「트렌트코리아 2016」에서 플랜-Z, 1인미디어, 취향공동체, 브랜드의 몰락 등을 선정

- ※ Z-세대는 소위 포스트-밀레니엄 세대 (post-millennials)로 2000년 이후 태어난 이들로,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모바일 네이티브로 교육과 소비, 커리어 모든 면에서 모바일 기술에 깊이 의존하는 세대를 지칭
- ※ 플랜 Z는 2015년 한국사회를 휩쓴 3대 현상 (경기침체, SNS 부상, 사건사고로 인한 불안·불신)에 따른 여파로 선정된 키워드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지칭, 최악의 상황이어도 순간의 행복에 충실한 세대의 등장의 소비 성향을 지칭

2. 주요 선진국가들의 비전

1) 미국

□ 대통령 선거

• 미국 국내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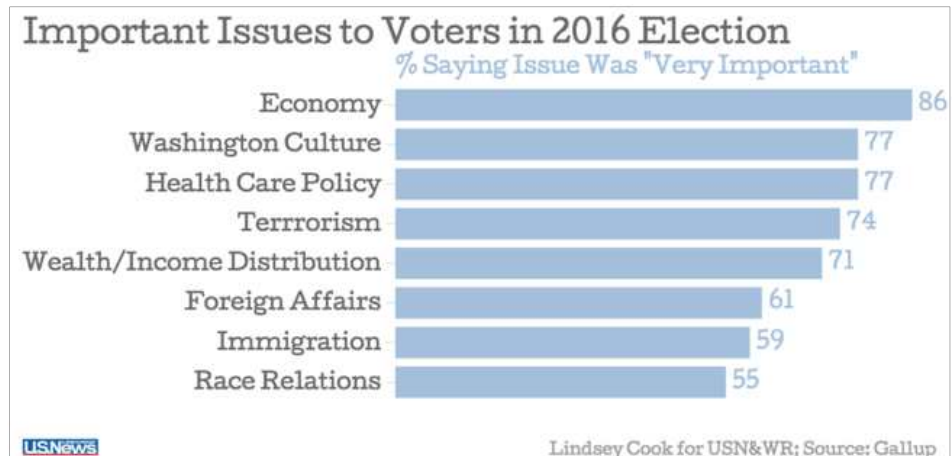
- ▮ 4년마다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주로 국내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 2016년 대선의 미국 국내 이슈: 이민 문제와 임금정체 문제, 가족계획(Planned Parenthood) 문제, 과세 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총기규제 문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 등
- ▮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철학적 신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임
- ▮ 공화당은 과세 축소, 작은 정부, 낙태 반대, 국경 강화,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의 주장,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역할 강화, 상위 1% 증과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착 지원, 환경보호 등의 입장을 취함
- ▮ 또한 공화당은 국가 부채 한도와 관련 미국의 현재 부채 규모(19조 불)가 과다하므로 더 이상의 부채 증가는 불가하다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국방비 지출과 함께 미 국민들의 경제 생존권 확보도 중요하다면서 푸드스탬프 지출, 교육, 과학, 의료 지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음
- ▮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적 불평등, 이타적인 야심, 워싱턴의 아웃사이더 강조

• 외교안보 이슈

- ▮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이슈는 시리아·이라크에서의 IS 대응, TPP 문제, 이란 핵합의 문제, 중국의 부상 문제, 유럽 이주 난민 문제임
- ▮ 외교 안보 분야 문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지지 계층 유권자들의 동향과 여론의 변화에 따라 쉽게 바뀔
- ▮ 공화당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강력한 대외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음

- 외교정책: 선택적 개입 접근(selective engagement approach)과 방어적 자세(출처: Global Forecast 2016)



● 전망

- 민주당의 경우 조지, 자크,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임
- 공화당은 아웃사이드 후보가 선출될지 아니면 기득권 정치인 후보가 선출될지 아직 알 수 없으나,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정당들은 대체로 주지사 또는 상원의원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을 후보로 선출해 왔음
-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8년 주기 교대로 집권해 온 점, 클린턴 후보가 신뢰도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어느 당 후보가 2016년 11월 미 대선에서 최종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 경제

- 금리 인상
- 완만한 경기회복
- 석유 가격 안정

- 소프트 경제 혁신(출처: 이코노미스트 2016 세계경제대전망)

□ 불평등 심화

- 500대 기업 CEO 16% vs. 근로자 2.9% (포브스 2015)
- CEO 937% vs. 근로자 10.2% 증가 (2014. 6.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1978- 2013)

2) 중국

□ 2016년 중국은 4대 전면의 ‘개혁심화, 의법치국, 소강사회, 엄격한 당 관리’ 를 천명하며 소강사회 실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음 (2015년 양회, 시진핑)

- 소강사회(2020년 중국의 1차 목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 ▮ 1단계: ‘온포(溫飽)’ 사회: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
- ▮ 2단계: ‘소강(小康)’ 사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
- ▮ 3단계: ‘대동(大同)’ 사회: 요순시대의 이상향

※ 소강사회는 예기의 공자와 제자 자유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시한 사회발전 단계의 두 번째

- 의법치국

- ▮ 중국이 종래의 인치적 국가 관리에서 완전히 탈피해 근대 국가적 통치 방식으로 전환함을 뜻함. 향후 10여 년간 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음을 의미
- ▮ 의법치국이라는 말은 서방에서 말하는 법치 즉, 법의 지배와 다름. 중국 특색의 법치는 곧 공산당이 영도하는 법치를 의미하며, 3권 분립에 의해 지탱되는 법치와는 다름. 이것은 중국에서의 민주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를 통한 민주, 인민민주전정(專政=독재)에서 말하는 민주라는 의미와 일맥상통
- ▮ 의법치국은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빈부 격차를 줄여 ‘중국의 꿈(中國夢)’ 을 이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당의 의지. 시진핑 정권은 집권 말기로 예상되는 2021년

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전략 목표 수립

- 일대일로

- ▮ ‘실크로드 경제 벨트’ 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의 약칭인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변 해역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임
- ▮ 특히 인프라의 구축과 상호 연결을 최우선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임
- ▮ 중국은 관련 국가와 항구, 철도 등을 연결하고 각국과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며 송유관, 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기초시설 연결을 통한 에너지 협력 추진

3) 유럽

- 테러: 무슬림포비아

- ▮ IS의 파리 테러로 인한 극도의 무슬림 공포와 다문화 갈등 충돌 위험 최고조에 달할 전망

- EU 통합 후퇴

- ▮ IS의 테러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하여 생겐조약(국경자유 통과협정) 일시정지
- ▮ 3백만명의 난민 유입 예상(Future of the European Economy, EU)
- ▮ 영국의 EU 잔류여부

- 경제

- ▮ 2016년 유로존 경제는 1.6%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독일: 민간소비 확대가 유지되고 정부정책으로 고정투자가 개선될 경우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와 중국 및 신흥국의 부진한 경기회복이 수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 프랑스: 저유가 및 유로화 약세 등이 경기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단기적으로는 테러 여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관건임

II 2016년 한국과 대전의 비전

1. 대한민국 거시변화
2. 대한민국 미시변화
3. 도시의 변화와 미래
4. 대전의 현황과 한계
5. 2016 대전 비전과 담론

II. 2016년 한국과 대전의 비전

1. 대한민국 거시변화

1) 거시변화

□ 성장잠재성 축소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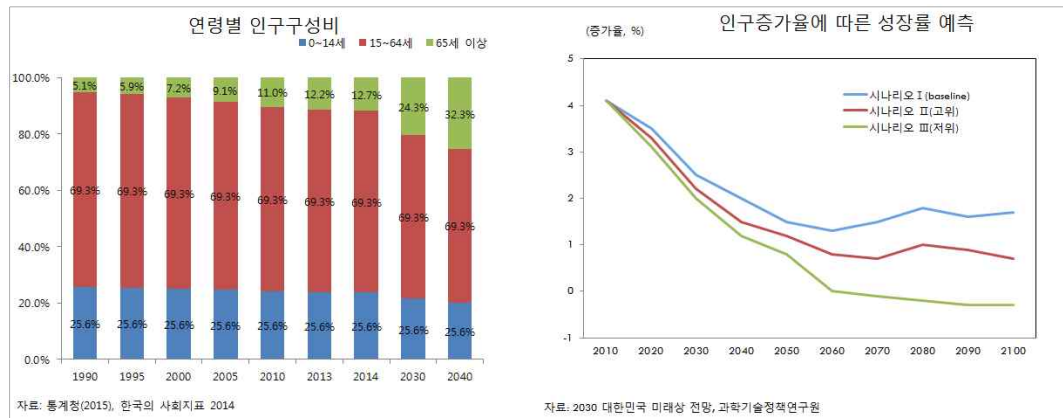
-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잠재성이 축소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위험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
 -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성 축소, 불평등 심화, 계층과 세대 간 갈등 심화, 바이러스 공포, 표준 가족의 해체, 복지 수요 증대 등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음
 - ▮ 과학기술은 신제조기술, 로봇기술의 급성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확산 등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원전, 일자리 감소 등 다른 한편으로는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2) 사회-경제부문

□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성장잠재성 축소

- 한국의 고령화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급속히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화 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 ▮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인구의 14%가 노년층, 2026년 20.8%가 노년층
- 취업률 감소세, 고령화의 여파로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일인당 GDP 성장률은 2011~2020년 3.2%, 2021~2030년 2.5%로 예측되나, 인구증가율에 따라 변동 가능 (STEP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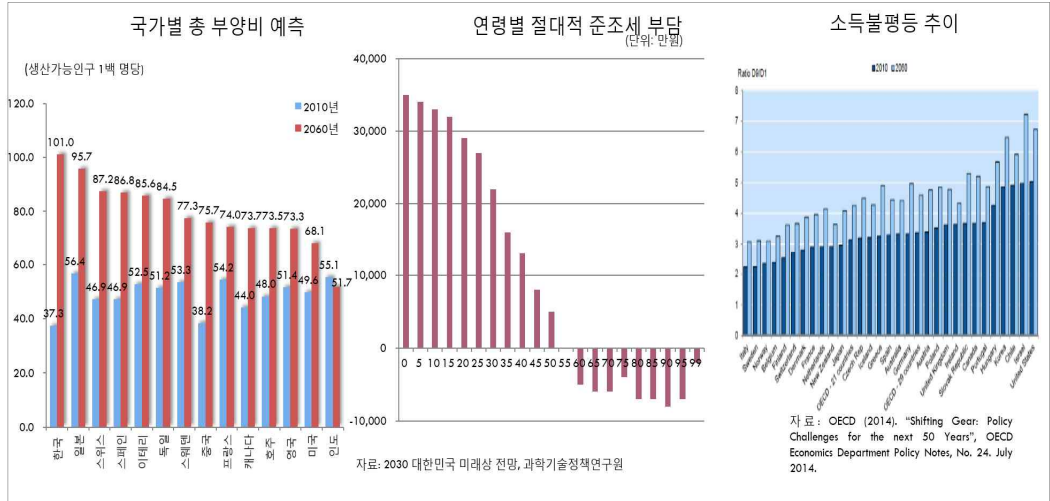


3) 정치부문

□ 세대간, 계층간 갈등 심화가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

- 고령화는 복지압박으로 다가오고, 세대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 ▮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백명당 총부양비는 2010년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60년에는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 연령별 절대적 준조세 부담 측면에서 1957년 이후 출생 세대에 있어 편의보다 조세부담이 점점 커질 전망으로 세대간 갈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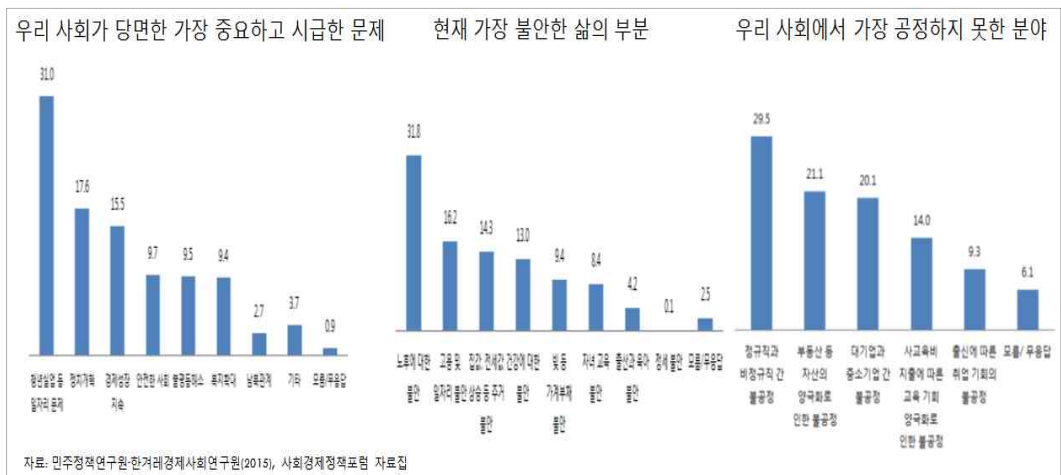
Ⅰ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한국은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되어 2010년 현재 OECD회원국 4위에서 2060년 3위로 악화될 전망



□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 정치개혁, 경제성장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가장 불안한 삶의 부분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고용 및 일자리 불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Ⅰ 우리사회의 공정성 부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공정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4) 과학기술과 안전

□ 한국 혁신시스템의 성장잠재성 고갈

- 현재 한국 혁신시스템은 연구개발 투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성과 산출에서는 격차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스템 실패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석유 안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과학기술의 기회와 위협

- 현재 선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 재탈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제조업 4.0 경향은 이후 새로운 산업 지형을 만들고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한편 로봇, 인공지능 등에 의한 노동의 종말, 혁신의 역기능으로서의 실업 문제 대두 등은 또 다른 과학기술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

2. 대한민국 미시변화

1) 최근 시민들의 인식과 감정

□ 경쟁 격화, 실업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불안, 무력감과 치유 열망

- 청년실업 증가, 경쟁 격화에 따른 무력감과 비정규직 양산과 작업환경 열악화에 따른 모멸감,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상시적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의 양산
- 이에 따라 치유와 위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소한 행복과 작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

□ 정치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대한 불신 증가에 따른 탈국가 현상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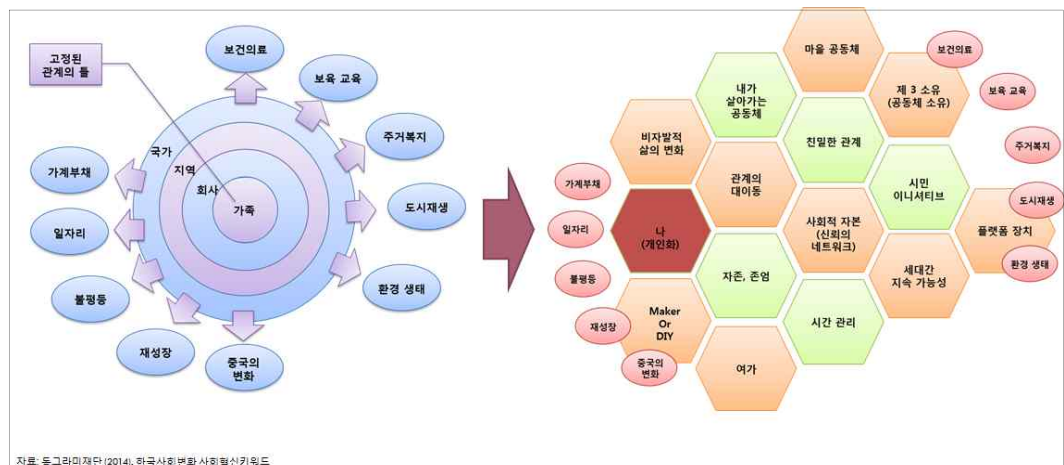
- 세월호, 메르스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증가와 불공정성과 계층이동의 기회 축소 등을 경험하면서 탈국가 현상이 대두



2) 한국 사회 분절화된 개인의 등장과 사회혁신의 중요성 증가

□ 수평적 관계망으로의 변화에 따라 사회혁신의 중요성 증가

- 과거 가족과 회사, 국가라는 수직 위계적 관계망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관계망으로 변화
- 이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구조적 개혁보다는 ‘개인’ 과 ‘공동체’ 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중요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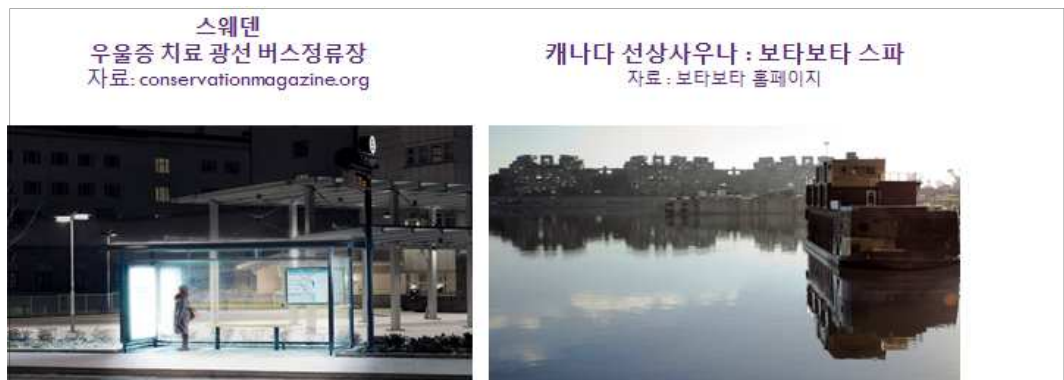
자료: 돌그라미재단 (2014), 한국사회변화 사회혁신키워드

3. 도시의 변화와 미래: 사람들은 도시에 무엇을 원하는가

1)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 익명성과 고립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이지만 위로와 치유의 공간기능 수요

- 도시 내에서의 고립성, 익명성, 개별화된 생활을 보완해 줄 위로와 치유의 공간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는 힐링공간, 어라운드 앱을 통해 익명의 위로 메시지와 사탕, 과자 등을 공유하는 달콤창고 등의 등장은 익명의 도시에서 위로를 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심리를 반영
- 스웨덴의 우울증 광선치료 정류장, 캐나다 몬트리올 도심의 보타보타 선상 사우나 등은 이러한 치유와 위로의 공간 기능을 대표하는 사례임



2) 공유와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 성장 잠재성 축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수요 증가로 인해 공유와 연대의 공간 수요 증가

- 임대료 상승과 도시 내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공동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
 - ▮ 최근 무거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임대하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나 도심 내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공유공간의 재생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이외에도 벼룩시장, 소셜다이닝, 소셜데이팅과 같은 재화의 교환과 공유활동의 등장은 공유와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기능에 대한 시민 수요를 반영하는 현상임



3) 재미와 창조 공간으로서의 도시

□ 재미와 창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수요 증가

-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재미와 창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창조경제 기조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테크샵, 리빙랩 등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일상적 창작욕구 충족 공간이 주목받고 있음
- 또한 교통, 도심공간 등의 도시인프라를 스토리와 결합하여 관광상품화하는 사례들도 재미와 창조 공간으로서의 도시 공간 수요에 대한 부응이라고 볼 수 있음

※ 아트모스페라 트램 관광열차 : 밀라노 주요 관광 포인트를 순회하는 트램관광열차



4)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도시

□ 도시안전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최근의 바이러스 창궐과 대형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전 대책 미흡, 해외의 테러 증가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짐. 또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전환(Urban Transition)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전은 환경적 가치와 과학기술을 결합한 도시 디자인을 통해 과학도시로서의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므로써 과학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도심의 공공공기청정기 스모그프리타워 프로젝트, 일광을 이용한 야간조명 자전거길인 반고흐길 등은 과학기술, 환경, 문화를 결합한 도시이미지 형성의 좋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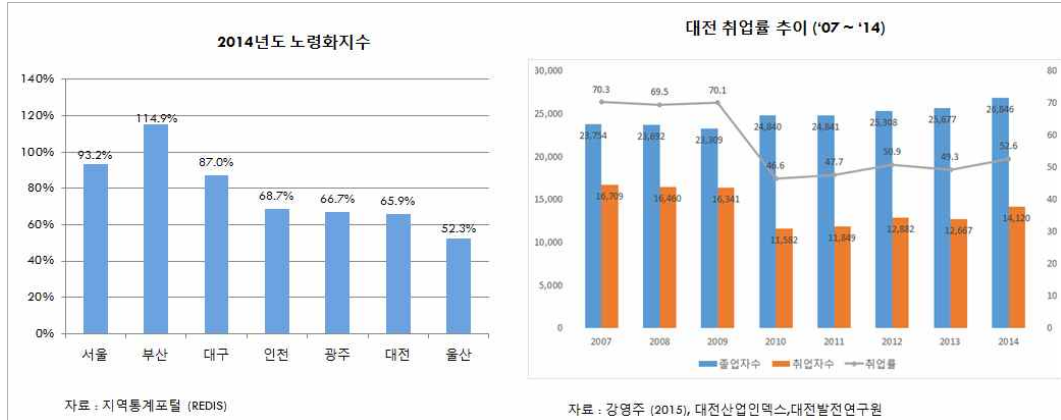
4. 대전의 현황과 한계

1) 젊은 도시 vs. 제한된 기회

□ 청년 세대 인구비중이 높지만 기회는 제한

- 대전은 7대 특광역시 중 낮은 노령화 지수와 높은 청년세대 비중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음
 - ▮ 6대 광역시 평균 청년인구 비중이 21.8%인데 비해 대전은 30.6%로 특광역시 중 2번째로 젊은 도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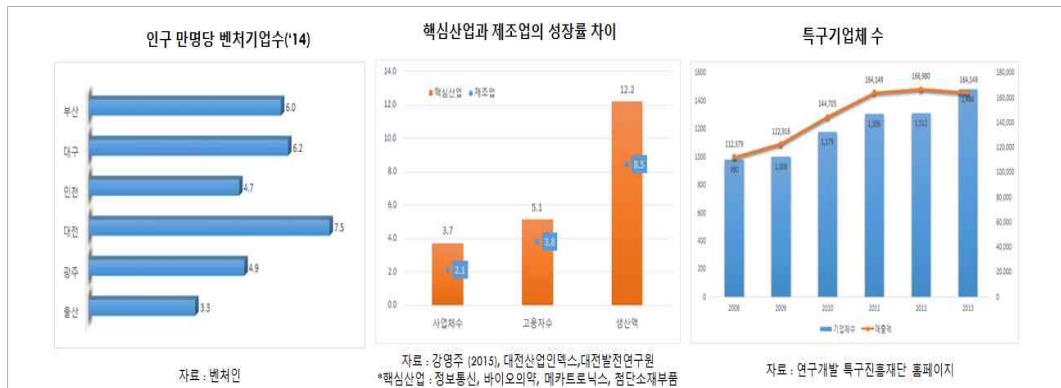
- 그러나 청년 취업률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감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주거빈곤율이 25%에 육박해 청년들의 성장 기회는 제한되어 있음



2) 경제: 높은 성장잠재성 vs. 지체된 성장

□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인한 높은 성장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지체

-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지로 높은 성장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적 규모 면에서 성장은 지체되고 있음
 - ▮ GRDP (지역총생산)는 전국 하위 수준이나, 1인당 개인소득 측면에서는 전국 4위로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비중이 높음을 나타냄
 - ▮ 대전의 인구 만명당 벤처기업 수는 6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으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핵심산업의 성장률은 매우 높음
 - ▮ 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과와 지역 기업 및 산업기반과의 연계부족으로 성장의 지체현상이 나타남. 또한 동-서 지역 간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균형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3) 높은 도시만족도 vs. 낮은 매력도

□ 대전 거주민의 만족도는 높으나, 외부로부터의 유입 요인은 낮음

- 대전 거주민의 만족도는 2014년 조사에서 80.6%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문화, 의료 등 거주편의시설 부족과 지역경제 침체 등 낮은 경제기회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유입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수 (2014)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건수 (2013)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13)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4)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14)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2014)	인구 십만 명당 체육시설 수 (2014)
서울	48	36.34	8.22	13.54	13.87	3.39	111.07
부산	22	37.86	17.63	10.45	17.75	2.24	88.74
대구	11	38.45	13.29	13.54	9.89	2.65	97.78
인천	7	33.08	10.39	7.09	17.07	3.03	103.39
광주	17	46.15	20.68	13.90	13.93	3.66	127.99
대전	15	31.63	14.55	9.50	18.08	3.53	107.45
울산	4	35.32	11.73	10.27	31.32	3.43	133.83

살기 좋은 이유	비율(%)
편리한 대중교통	25.9
산, 하천, 공원 등 자연환경의 우수성 및 접근성	28.4
대기오염,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가 적음	14.8

살기 나쁜 이유	비율(%)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	13.9
지역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47.4
대중교통 접근성과 복잡한 도로	13.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대전: 대전의제21 (2014), 대전시 지속가능지표 시민의식조사

4) 양호한 복지 인프라 vs. 맞춤형 복지 미흡

□ 대전은 양호한 복지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 체계는 미흡

- 대전의 복지 인프라는 타 시도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나, 복지사각 지대의 상존, 공공의료 기능 취약, 맞춤형 복지 시스템의 미흡 등 일반적 수준의 문제는 지속

▮ 65세 이상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노년층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큼

- 계층별 맞춤형 - 일자리 연계 복지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함

대전 복지인프라 현황					대전 연령별 취업률			
도시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2012)	유아(0~4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 (2014)	인구 천명당 요양기관수 (2012)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시설 수 (2012)	구분	2014	10~14 연령권 성장률	전국
서울	6.95	16.78	2.64	2.13	15~29세	41.3	1.8	40.7
부산	7.32	14.52	1.75	3.30	30~54세	76.9	1.0	76.7
대구	11.97	15.51	1.82	3.40	55~64세	64.4	2.8	65.6
인천	11.39	16.92	1.37	3.47	15~64세	64.6	1.2	65.3
광주	9.73	17.98	1.74	5.96	65세 이상	22.3	3.3	31.3
대전	10.10	23.11	1.82	3.56				
울산	5.06	16.06	1.45	5.2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5. 2016 대전 비전과 담론

1) 2016 시정 4대 전략

□ 2016 시정 핵심전략

- 2016 대전 시정의 4대 핵심전략은 행복경제1·2·3 프로젝트, 대전형 도시재생, 젊은 도시·청년대전,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선포

	핵심전략	정책 과제
경제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 창업정책 • 첨단산업육성 • 산업단지 조성
도시	대전형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충남도청사 활용 • 중앙로 차없는 거리 운영
청년	젊은 도시, 청년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정책 리딩그룹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청년 인턴십 확대
안전	시민이 안전한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ity 통합센터와 112·119 연계 •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

2) 2016 대전의 주요 이슈 : 전문가 조사와 시정방향

□ 공유·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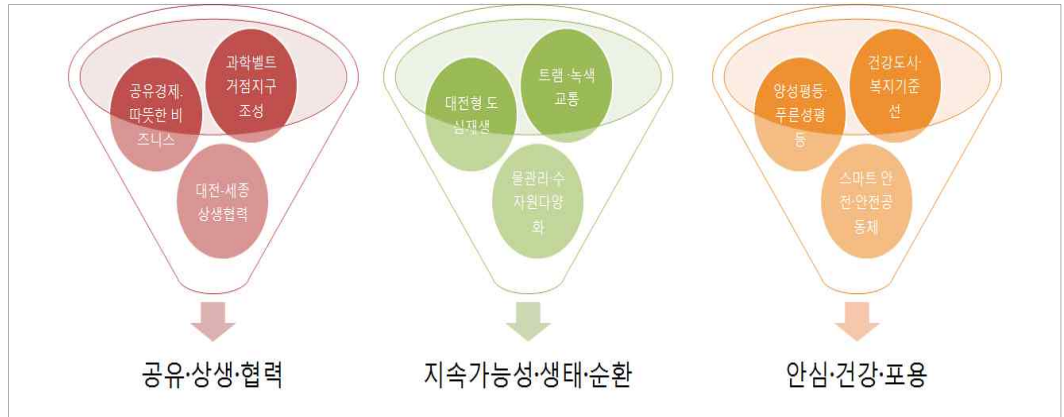
- 과학벨트 거점지구 본격 조성에 따른 대전-대덕 상생협력, 공유경제와 공동체 기반의 사회경제활동의 본격화, 청년 희망 경제-사회 시스템 형성, 대전-세종 상생협력 등 공유, 상생, 협력의 가치가 강조될 가능성이 높음

□ 지속가능성·생태·순환

- 대전형 도심재생, 트램 등 녹색교통에 대한 수요 지속, 물 관리의 중요성 대두와 수자원 다양성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생태, 순환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대두

□ 안심·건강·포용

- 불안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스마트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복지기준선 마련과 건강도시 수요 증대, 양성평등, 청년계층의 푸른 성평등 등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안심, 건강, 포용이 주요 가치로 대두



3) 2016 대전 비전

□ 안심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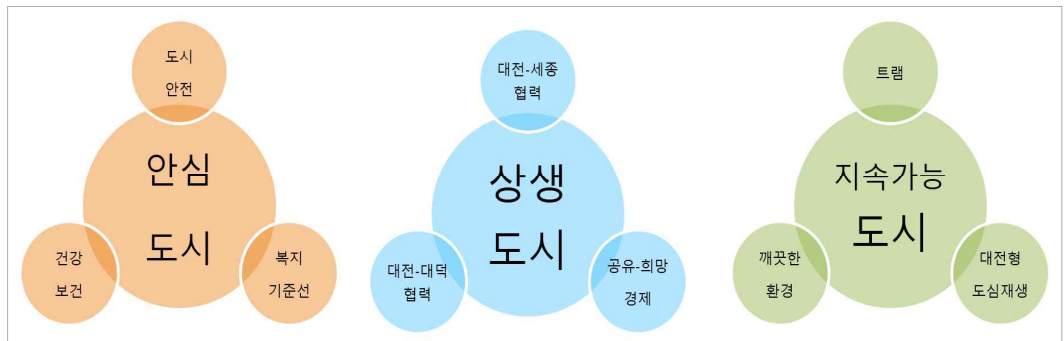
- 도시안전, 복지기준선 마련, 건강·보건 등 안전사회에 대한 욕구와 대전 이슈를 반영한 안심도시

□ 상생 도시

- 지역 내부적으로는 공유경제, 청년층에 희망을 주는 희망경제에 대한 욕구와 대전-대덕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전-세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생도시의 가치 부상

□ 지속가능(전환) 도시

- 트램 등 녹색교통, 대전형 도심재생, 수자원과 자원순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욕구가 증대



4) 2016 대전 비전에 따른 시정추진과제

□ 안심 도시

• 도시안전

- ▮ 예방적 재난안전망 구축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CPTED)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
- ▮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프로그램과 환경방사능 감시망, 안전체험 등 공동체 기반의 안전복지도시 조성

• 건강·보건

- ▮ 신종감염병 발생예방 및 신속 정확한 대응, 선제적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를 통한 대기오염 경보제 실시 등

• 복지

- ▮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하고 로드맵 제시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사용자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희망티움센터’의 확대운영과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관 운영,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 상생 도시

• 대전-세종 협력

- ▮ 대전-세종 협력의 물적 인프라로서 충청권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추진하고 대전역~세종~오송역을 잇는 광역 BRT 연결도로를 건설 및 운행

• 대전-대덕 상생

- ▮ 특허법원 관할 집중제 활용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대, 대전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을 통한 초기창업 활성화
-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간 협업을 통한 고용 Zone 개소, one-stop 취업·창업 시스템 구축

• 희망 경제

- ▮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시행, 청년희망펀드 활용 다각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강화

□ 지속가능(전환) 도시

• 대전형 도심재생

- ▮ 문화예술 및 시민참여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대전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지원

• 녹색교통

- ▮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트램 개통, 유성광역복합 환승센터 조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확대 등 교통의 공영기능 강화

• 환경

- ▮ 안전한 급수체계,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공급,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유해물질 조사 시행과 확대

참 고 문 헌

1. 강영주 (2015), 대전산업인덱스, 대전발전연구원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2030 대한민국 미래상 전망
3. 김난도 외 (2015), 「트렌드 코리아 2016」, 서울: 미래의창
4. 기획재정부 (2015),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함께 일구는 창조적 미래를 향하여」, 서울: (주)휴먼컬처아리랑
5. 대전광역시 (2014), 「2014 대전의 사회지표」
6. 대전광역시 (2015), 주요업무보고: 2015년 주요성과 및 내년도 변화되는 주요 시정 중심
7. 대전광역시·대전발전연구원(2015), 「대전비전 2030」
8. 대전발전연구원 (2015), 대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I
9. 대전의제 21(2014), 대전시 지속가능지표 시민의식조사
10. 대전청년고리 (2015), 2015 대전청년 보고서
11. 동그라미재단 (2014), 「한국사회변화 사회혁신키워드」
12.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김정환 역, 서울: 미래엔
13. 민주정책연구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자료집
14. 이달석 (2013), 「석유안보 강화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5.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2014」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KISTEP 미래한국 보고서」, 서울: 한스미디어
17. KAIST 미래전략대학원 (2015),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서울: 이콘
18. KOTRA (2014),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19. 시사저널 (2015), 「Hot Issue 2016」

Ⅲ 2016년 대전의 발전 전략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2. 민선5기 평가 및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3. 대전지역사회 진단
4. 대전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
5. 2016 대전지역발전 과제모색
6. 나오는 말

Ⅲ. 2016년 대전의 발전 전략과 과제

1. 들어가는 말

-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임. 또한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가 본격적인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 보다는 여전히 중앙정치권에 기댄 목소리만 간혹 분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함
- 이에 연구자는 실종된 지방자치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다음과 같이 대전시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고, 그리고 2016년에 대전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몇 가지 우선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민선5기 평가 및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1) 민선5기 대전시정 평가

- 지난 민선5기 대전시정의 주요성과로는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낸 것과 HD드라마 타운 유치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 관련 평가에서 과거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냈음
- 또한,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하고, 이외에도 NGO대회 개최, 금요민원실 부활,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으며,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대학 만들어 단기적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함
-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실망감이 컸던 시기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당장, 도시철도2호선 추진 논란,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논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 각종 인사논란 등의 경우처럼 이런저런 갈등과 논란을 초래한바 있음
- 특히, 전현직 시장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민선5기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방식과 시책추진 과정의 문제를 드러내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 결국, 다듬어지지 않은 민선5기 공약사업(9조4천5백억원)과 대전시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각종 갈등을 조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무조정 기능의 부재는 민선5기 대전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배경이 되었음
- 민선5기 대전시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 백지화에 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사수하고, HD드라마타운 및 효문화진흥원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서남부권 호수공원사업이 국비확보 실패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 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 대전선거구 확보 실패,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정치력과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음

- 또한, 민선5기 출범 전후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고가, X축, 순환형,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시의 소통부족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임기 3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몇몇 인사의 경우 임명된 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잡음을 낳으면서 대전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2) 민선6기 약속사업 진단

- 민선6기 출범 이후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으로 확정, 사이언스 콤플렉스사업도 확정하고 갈등조정 및 소통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활동에 돌입
-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 산하 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며,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과 2017년 아시아 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유치 등 여러 국책사업에서 성과를 낸바 있음
-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선택 시장의 선거재판에 따른 우려로 인해, 시장에 당선된 단체장이 시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대전시민들이 시장의 안위와 시정을 걱정해야 했던 지난 1년이 아니었나하는 솔직한 생각도 들
- 유례가 없이 구성되어 운영되어온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된 민선6기 약속사업(4조7천2백15억원)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대체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런점에서 본격적인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철도2호선 등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운영,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3. 대전지역사회 진단

1) 대전지역사회 특징

-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강한 도시라 사료됨
- 반면, 사회적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 등 출신지별로 조화를 이루면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토호기득권세력)에 의해 지역의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는 도시라 생각됨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조업체 수가 인구 83만여명에 불과한 청주시 보다도 적어 생산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국책 및 민간연구소가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1,200여개의 연구기관 및 기업)와 3청사 등의 공공기관(수자원 공사, KT&G, 조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15개) 등 과학 및 지식기반의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가 집적된 도시라 평가됨
- 대전의 성장과정을 들여다보면 100년전 일본인에 의해 도시가 만들어졌으며, 1950년대 한국전쟁과 6,70년대를 거치면서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과 영호남 지역 등에서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 이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구단지의 조성은 지금의 대전을 만드는 성장 원동력이 됨
-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와 정부 3청사 이전, 그리고 둔산신도시 개발과 2000년대 KTX개통은 대전이 과학, 행정, 교육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근간이 됨. 반면에 대전 도시성장 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 만큼 들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공원을 보존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전되고 있는 지역관련 이야기와 유적지를 기록 보존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하지만, 대전이라는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제대로된 민간 연구소하나 없으며, 지역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사회 연구성과는 매우 부족한게 현실인 만큼, 지역사회 연구와 관련한 지역사회 차원의 각별한 노력과 지원 또한 절실히 보임
- 행정도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에 따라 대전은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으며, 세종시 배후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찾고 만들기 위한 나름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면 대전의 미래를 결코 보장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대전세종을 비롯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전, 공주, 부여 그리고 서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행동해야 함
- 또한, 출신지간 벽을 허물고 연구단지과 비연구단지간 이질성과 원도시와 신도시간의 격차도 극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협치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지방자치 20년 진단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찾아보기 어려움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그놈이 그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자영업자에게 장악되어 있어, 이런 지역 기득권 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생태적 가치, 분배정의 등을 추구하는 생활정치 보다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
-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분산, 재정이양등 지방분권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국토 불균형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중심의 정책에 대해 지방의 대응은 점점 약화되고 수도권으로 산업과 인력과 재원의 집중성은 심화되고 있음
-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우리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 독주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 전문성과 자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아울러, 시민사회의 성숙은 미약하며, 언론의 취약한 재정기반은 지방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음

3) 지역정치 진단

-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방정치가 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대전지역 정치 또한 단체장 주도형 지방 정치에 가장 가깝다는 것임
- 대전지역 정치가 자치단체장 주도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유권자의 대리인 통제는 그 메커니즘이 취약한 한계와 토호기득권세력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지방의회를 통한 행정부의 견제나 감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다는데서 기인함
- 최근 지역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과 반목의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 보다도 갈등과 증오의 지방정치가 득세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정치풍토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이 지방 정치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음
- 이런 영향으로 인해 풀뿌리 지방정치 구도도 점차 국회의원 및 중앙정당의 부속물로 전락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음
- 대전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정치의 특징으로는 전직 단체장들간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런 현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선거에까지 갈등구조가 이어오고 있으며, 문제는 앞으로 있을 선거국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기타 지역현안 진단

-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민선6기는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신 받는 지방자치에서 신뢰받는 지방자치로 만들어야 하는 정치사회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양극화를 비롯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도 안고 있음

- 특히,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음.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음
-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흐름속에서 대전지역사회의 주요한 현안 또한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살펴 볼 수 있음.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의 파행, 지역내 동서격차 문제, 계층간 사회양극화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의 비경제적인 관점의 지역현안들도 있었지만, 지난 20여년간 대부분의 지역현안은 가치 중심의 정책공방에 따른 현안이 아닌 도시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된 문제들로 점철되고 있음
- 이를테면, 도시철도, 도시고속화도로, 롯데테마파크, 성북동레저타운, 대형 쇼핑몰 입점, 도시재개발, 신도시개발, 각종 외자 및 민자유치 논란, 대형 토목 건축사업 등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확신에 찬 꼼꼼한 정책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단기적 목표아래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완공이후에도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았음

4. 대전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

- 대전시는 이미 인구증가세가 감소하고 계층화 계급화가 나타나는 후기도시화 시기를 거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 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계급,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 이에 연구자는 민선6기를 새로운 지방자치 대전을 만드는 연결점 역할을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①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②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역 리더쉽 쇄신 이라는 3가지 방향의 총 10가지 세부 비전과 전략방향을 제시했음. 이를 바탕으로 다음장에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향후 비전과 전략 방향	
①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②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역리더쉽 쇄신	



1.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①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②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2. 지속가능한 시정	③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④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⑥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3. 지역리더쉽 쇄신	⑦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기반 조성 ⑧ 공직부패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⑨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방안 모색 ⑩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2016년도 대전광역시 단기 과제 제시

1)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 지방자치 20년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함. 그동안 지방자치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사업을 펼치기에 급급했음

-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

2)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성장 관리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세계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개최하고 각국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 이런 세계적인 흐름은 당장 대전시를 비롯 지방정부도 환경분야 뿐만이 아니라, 경제산업, 도시교통, 삶의 질 등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함
-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 관리’ 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해 도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포함해 광역권 차원에서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 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성장 및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으며, 특히,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과 오염예방과 통합관리가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아울러, 민선5기의 ‘습지보호지 지정’, ‘대전 깃대종 선정’ 등의 사례에서처럼 주요 생물 서식지 및 보호지역에 대한 대책수립 등 멸종위기 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함

3)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대전은 서비스산업 기반이 강한 반면에 제조업 등 2차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도시로, 각종 선거때만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함
-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 이를테면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 비전을 제시함
- 또한, 최근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대책을 내 놓고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주거·일자리·환경·교육 등 지방정부 정책 전반에서 지역내 경제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설정·제시함

4) 도시공간의 효율제고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 충청권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은 좁은 도시 공간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불균형문제, 교통문제 등 도시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에 대한 도시공간의 사회적 효율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대전의 경우 불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제시함
- 아울러 도시공간의 효율 제고의 관점에서 도시농업, 생태공업단지,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우후죽순 들어설 계획인 대형 쇼핑 시설의 입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경제영향평가제’ 등의 지역경제 호보 및 육성정책을 마련
- 또한, 날로 혼잡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목표 제시와 더불어 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제시

5)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모색

- 여전히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사업의 정상추진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응 등 충청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님
- 특히,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국가적 행정중심기능을 수행할 행정도시 조성 21세기 과학 및 원천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과학벨트 조성 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 따라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충청권 4개시도간의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TX호남선 세종역 설치 등 충청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으로 인해 충청권의 상생발전 2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책의 연계 및 지역통합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6)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시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 위주의 정책은 교육, 의료, 주택 그리고 아동·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음,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와 사회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역할과 대안을 지방자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극복할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거시 목표 뿐만아니라,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 보장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정확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보육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교육기회의 균등성 부여를 위해 공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사교육 경감 대책, 공교육 정상화 등의 거시적인 비전과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임

7)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기반 조성

-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을 들 수 있음. 이를테면 조례하나를 만들어도 중앙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자치입법권의 제약이 심했고, 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도 문제, 지금까지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각 제도의 실행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서 주민이 활용하기 어려웠음.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부패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년이 넘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게 현실임
- 아울러, 중앙정부도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치’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들러리로 치부하고 있는게 지방자치의 냉정한 현실임
- 따라서 지방재정난, 수도권규제완화, 복지정책 등 각종 정부 정책의 올바른 추진과 갈등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방안을 마련, 또한,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함

8) 공직부패 근절 등의 행정혁신 방안 제시

- 지난 민선5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1/3 가량이 각종 비위행위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견제 장치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는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 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런 지방재정 위기의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급증,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등 외부적 요인을 언급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의 무리한 사업성 재정지출 증가 등도 중요한 원인이라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직부패를 근절하고 지방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하며, 아울러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 지방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공기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대전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인사청문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나름의 비전을 제시 할 것으로 사료됨

9) 지방위기를 극복할 자치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내외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 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위기, 수도권규제완화 등 지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지역차별시정제도 도입, 지역통합발전위원회 설치, 합리적 수도권관리체제 운영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연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정체성과 관련한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역사회연구실태(2015) 조사결과 대전에는 총 15개의 대학과 연구단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구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각 분야별 연구는 대구, 광주 등 유사 광역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지역연구 총량과 연구기관 다양성, 그리고 순수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성과는 대구, 광주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 따라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지원체계의 고도화 노력을 전개할 필요하며, 특히 연구과제 발굴에 있어서 현재 미흡하다고 지적된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시민 삶, 역사,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됨
-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산업·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구와 관련한 비전도 제시해야 할 것임

5. 2016년 대전지역발전 과제모색

- 앞 장에서 제시한 대전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함

1)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준비

-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
 - ▮ 관련분야에 대한 대전광역시차원의 진단(연구)과 시민적 합의, 행동 준비
- 온당면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재검토
 - ▮ 기존 각종 법정, 비 법정 중장기 보고서에 대한 시 차원의 재검토와 대안 모색

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준비

- 패러다임전환을 반영하고 지역(대전)주도의 신 성장동력 발굴
 - ▮ 과학과 문화, 지역, 시민이 융합되는 신 성장동력 발굴
 - ▮ 과학벨트 조성,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 ▮ 더 이상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 총선 등 선거국면에서 지역주도 성장동력 발굴하려면 조속한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대전경제 특성이 반영된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모색
 - ┆ 전체적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지역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 ┆ 지역경제 특징으로 1인당 생산량은 작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 ┆ 전국 2위의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과 자본규모가 적고 영세한 서비스산업 특성
 - ┆ 충남지역에서 자본유입 높으나 수도권으로의 자본유출도 매우 높음
 - ┆ 대덕특구와 공공부문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모색
 - ┆ 연구단지와의 연계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활성화 방안모색
 - ┆ 수도권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산업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함
- 소상공인 보호육성 방안모색
 -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강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 ┆ 고삐풀린 무분별한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 ┆ 대규모점포입점계획(2012년) 재검토 필요
 - ┆ 최소한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영향 평가> 도입

3)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도시균형발전
 - ┆ 대전광역시 도시공간 전체에 대한 재편과 맞물려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되어야 함
 - ┆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및 균형발전 관련 시책을 통합 재검토
 - ┆ 원도심 다세대주택 난립에 따른 영향(도시계획, 주차, 교육, 안전 등)평가 추진
 - ┆ 대전역세권 개발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을 계기로 원도심 일대 전체의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의 효과확산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추진
-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 Ⅱ 최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방
- Ⅱ 2016년 4월 총선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 Ⅱ 총선 앞두고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문제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력요청
- Ⅱ 정부와의 공조협력 통해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조기 확정 필요
- Ⅱ 국회와 지역(대구, 경북)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되지 않도록 하는 리더쉽 발휘

4) 도시철도 2호선 논란종식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큼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대전시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 대중교통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계기로 활용
 - Ⅱ 따라서 기존 대전시도시교통중기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실이 불가피 함
 - Ⅱ 특히,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의 사업효과를 높이려면 BRT와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

5)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

- 분출하고 있는 복지욕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시정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
 - Ⅱ 기 추진하고 있는 대전복지기준선에 대한 실효성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Ⅱ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육시설 확충 및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민적 공감대의 형성 필요

6)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모색

- 행정도시 정상건설,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의제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 세종시는 행정도시 대전시는 과학도시의 위상을 서로 살릴 수 있는 협력방안 강구
 - ▮ 충청권행정협의회 상설협력기구로 위상 격상 필요함
 - ▮ 기존의 거시적인 지역경제 및 개발위주의 협력내용 보다는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 충청권 상설협의체는 지방위기를 극복하는 선도기구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당장은 대전-세종간 공조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함
 - ▮ 양지역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하고 시너지를 확장할 방법을 강구함
 - ▮ 대전-세종 통합 연구원 설치(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두 지역간 윈윈 방법이 될 수 있음)

7) 지방자치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발휘

-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쉽 발휘
 - ▮ 지방자치의 위기, 지방재정의 위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중앙집권 강화 등으로 심각한 지방위기 도래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 지역적인 차원의 노력 부재
 - ▮ 따라서, 광역단체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의 공조협력과 범 지역을 규합하는 리더쉽이 절실함
-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운영
 - ▮ 각종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정운영을 표방은 하고 있음
 - ▮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 시민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따라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함
- 공직부패 방지 노력

넘어서는 그야말로 주민참여시대가 활짝 열리는 오늘날 행정의 최고의 이념가치는 투명성과 형평성, 책임성이 되어야 함

-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대전시정의 가장 큰 책임은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큼.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 않음
- 향후에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면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한 심사숙고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더 이상 선거와 잘못된 시민여론을 의식해서 그것을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현실을 빙자하여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될 수 없음. 그런 점에서 대전시민들 또한 공공재를 남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대전시정을 위해서는 국회나 지방의회, 더 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문 헌

1.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2. 권선택(2015),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대전광역시
3. 금홍섭(2015), NGO활동 진단 및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 : 대전참여자치연대 20년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한국NGO학회
4. - - -(2015), 대전대중교통 진단 및 활성화 방안, 김동섭 대전광역시의원 주관 토론회 자료집
5. - - -(2012), 정책과정에서의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NGO활동가와 공무원 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대전광역시(2014),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
7. 대전광역시(2015),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대전광역시
8. 박상필(2005), NGO학-자율·참여·연대의 동학, 서울: 아르케
9. 박정택(2007),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학국학술정보(주)
10. 변창흠(2013),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토론회
11. 신희권(1999), 지방정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한국행정연구8(1)
12. 시민경청위원회(2014), 약속 그리고 선택 : 민선6기 권선택의 약속사업 실천방안
13. 원구환 외(2014), 민선6기 분야별 정책방향, 대전발전포럼
14. 송재봉(2015), 지방자치 현실과 혁신방향-지방자치운동은 지역을 바꾸고 있는가?, 혁신자치포럼 창립포럼
15. 장수찬 외(2012), 대전연구시리즈 I 대전사회론, 대전발전연구원
16. 최진혁(2012),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비교고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수시연구보고서 2015-02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발행인 대전발전연구원장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본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 및 대전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